

제5회 일본 진단 세미나

- ◆ 주제: 중일관계와 세력전이: 중국 지도부의 권력교체를 주목하며
- ◆ 일시: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15:00-17:00
- ◆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L Room
- ◆ 발표: 이동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 연구교수)

■ 발표 내용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이동준입니다. 사실 저는 중일관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중일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정치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일관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껏 중일관계는 정치는 차갑더라도 경제는 뜨겁다는 '정냉경온(政冷經溫)'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 경향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센카쿠 국유화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에서 격렬한 반일시위가 일어났고, 중국내의 일본계 슈퍼마켓과 중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변화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 일본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화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팽배한 일본 정치권은 '무례한' 중국에 대해 대등하게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정치학자는 센카쿠 문제로 중일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 특히 중국은 해상 영토에 대해선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일관계는 파탄으로 치달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내정치적 요소가 중일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정치에는 수사적 측면이 많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양국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저에게 제시된 발표주제는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중일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중일관계'라고 하면 마치 중국 지도부의 권력교체가 중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중일관계가 이번 지도부 교체로 인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좀 더 거시적으로 중일관계를 조망하자는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타이틀을 조금 바꿔 보았습니다. 즉, '중일관계와 세력전이'라는 거대한 담론 속에서 중일관계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앞으로의 중일관계를 어떻게 조망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최근 권력교체를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의 중일관계에서 최근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양국 국력의 역전 현상입니다.

다. 중국의 부상이 국제정치학의 최대 화두가 된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계기로 종합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일본이 과거의 '경제대국'에서 '중견국가(middle power 또는 secondary power)'로 그 위상이 전락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국제정치에서 일본의 위상이 너무 위축되어 중일관계는 잘 보이지도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일관계에서 대칭성보다 비대칭성이 커지면서, 중국을 위협으로 보느냐 아니면 위험으로 보느냐에 따라 일본의 대중정책은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의 관계의 측면만 보더라도 중일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일관계에는 미국이라는 패권국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의 힘의 구조는 단순히 중국 대 일본이 아니라 중국 대 미일동맹이라는 형식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도전은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 그리고 세계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일 양국 관계가 다층다변화해 소수의 권력엘리트뿐만 아니라 양국의 여론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전개되는 중일관계를 어떠한 이론적 틀로 조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저는 국제정치학의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국제관계 이론에서 강대국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배적 이론은 '세력균형론(balance of power theory)'입니다. 세력균형론에 따르면, 패권이 존재하는 구도는 불안정하고,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있다면 다른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 국가에 대항하면서 세력 균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론을 지금의 중일관계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세력균형론은 그 전제로서 국제사회의 무정부상태(anarchy)를 전제로 하는데, 동북아에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super power)이 외부에서 개입하므로 무정부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이 전후 아시아의 지역 질서를 규정해 왔고, 미중 수교 이후에도 중국이 이 질서에 순응해왔다고 봅니다. 둘째, 세력균형 이론은 기본적으로 대륙적 체계(continental system)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중일관계는 대륙과 해양국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균형 이론은 파워의 배열구조를 중시하는데, 중일관계에는 파워 만이 아니라 이익, 가치 등 다른 복잡한 요소들이 개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세력균형론보다는 오겐스키 등이 주장한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쪽이 설명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력전이론에 따르면 부상하는 국가는 기존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고 이 과정을 통해 패권이 전이됩니다. 이 이론은 힘의 배열 구조의 변화 보다는 국가들의 내부적 성장과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지역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동북아의 경우 지역질서의 주도세력(leading power)으로서 일본을 포함한 미일동맹이 있고, 이 질서에 대한 도전자로서의 중국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력전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기존 패권국과 부상하는 국가의 상대적인 힘의 관계, 그리고 부상하는 국가가 기존 패권국이 구축해 놓은 질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미중일 관계 속의 중일관계에 적용해 보면, 중국, 미국, 일본의 상대적 국력과 중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 힘의 측면에는 미일동맹에 대한 중국의 상대적 국력, 핵능력, 그리고 지정학적 요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존 질서에 대한 만족도의 측면에서는 특히 경제적 상호의존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구성주의적 요소로도 볼 수 있는 중국의 대국관, 역사인식, 내셔널리즘, 중일 간의 상호인식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각론으로 들어가 우선 중일관계에서의 힘의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도쿄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GDP와 군사비에서 중일 간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드파워의 격차는 향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일 구도가 아닌 미중일 구도에서 보면 중국이 미일동맹의 경제 및 군사적 역량에 비해 대등한 수준의 국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평화헌법 개정,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을 통해 보통국가로 변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공세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 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대 미일동맹의 관계라는 관점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큰 위협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상당기간 현재와 같은 세력균형 구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중국의 해군력 강화가 돋보입니다. 여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우주전력, 사이버 전력의 강화, 미국의 접근(access)에 대한 반접근(anti-access) 전략 등으로 중국의 위협이 부각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어쩌면 중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평형(parity)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 확충은 경제력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질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전력이 여전히 중국에 앞선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중국이 동북아시아를 제압할 정도로, 특히 항공모함 등을 통한 군사력 투사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을 구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센카쿠 열도가 중국의 희망대로 분쟁지역화 되었지만, 그렇다고 동중국해에 커다란 안보공백(security vacuum)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미일동맹 주도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지요.

다음으로 국력 증강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기존 질서를 계속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불만을 갖고 미국 및 일본과 맞설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죠. 중국은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100여년 간 상실한 강대국(great power)의 지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만 급격한 부상, 급한 도전은 반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평화적' 발전, 적절한 '굴기'를 희망하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진핑 체제는 큰 틀에서 이 같은 중국의 딜레마를 안고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엄청난 권력투쟁이 전개되는 등 시진핑 체제는 무엇보다 국내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진타오 계열은 사실상 리커창 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장쩌민파의 완승, 후진타오파의 완패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치권력의 내부 사정에 관한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당대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이나 정치개혁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새 지도부가 체제의 안정과 성장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진핑 체제가 표방한 대외정책 방향은 '신형대국관계'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2월 미국방문 때 제기한 것인데, "미중이 양국의 핵심이익과 중대관심사에 대해 상호존중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한다"는 다소 애매한 내용입니다. 다만 신형대국관계는 키신저가 저서인 'On China'에서 '미중 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주창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대국이라면서 또 다른 대국, 즉 미국과는 충돌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겠다, 지구는 미중의 공동발전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 중국은 미

국식의 패권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부상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중국은 미국에서 제기한 G2보다는 C2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 C가 상징하는 것은 협력(cooperation), 조화(coordination) 등입니다. 따라서 대체로 시진핑 시대의 대외적인 캐치프레이즈는 '도광양회를 견지하고, 유소작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堅持韜光養晦, 積極有所作為)'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므로 도광양회를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핵심이익을 지키겠다는, 상호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평화적 부상'을 지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세적이면서도 방어적 속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국력의 쇠퇴를 맞보고 있는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학에서는 주로 편승(bandwagoning)이나 균형전략(balancing)이냐의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체로 일본은 균형전략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더 정확하게 보면 이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헤징(hedging)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전략 방향은 통합(integration), 균형(balancing), 억지(deterrence)가 결합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일동맹에 기초한 안보정책을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힘에 편승하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체로 대중관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사실 중일관계를 보면 갈등적 요소도 많은 반면, 경제적 상호의존도 큼니다. 지난 20년간 일본이 대중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해 중산층이 많아지면 일본의 수출품을 위한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이미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만큼,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상당히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한편, 중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중일 FTA 협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RCEP(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즉 ASEAN과 한중일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포함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블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이미 TPP를 통해 사실상의 중국 포위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일본은 국내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당 정권은 TPP 협상 참여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한중일 FTA만 해도 EU, NAFTA에 이어 세계3대 경제블록이 되는데, RCEP가 성사된다면 세계 1위로서 전 세계의 40% 정도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제외되는 거죠. 이 같은 경제 블록화를 둘러싼 미중일 관계는 향후 중일관계, 나아가 세력전이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일관계를 보는 척도 중의 하나로 상호인식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인의 대중 호감도와 중국인의 대일 호감도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관의 측면에서 중국은 전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지만 일본은 전후가 끝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본 연구경향을 보면, 중국이 주장해온 기존 질서나 중국이 내세워 온 원칙에 기준을 두고 일본이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중국위협론을 강조하고, 특히 국력의 역전에 따른 엄청난 상실감 속에서 우경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여론 만이 아니라 지식인 사이에서도 인식의 괴리가 상당히

크고, 중국위협론이나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대한 상호 인식의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 대한 외교정책과 양국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세력전이론을 적용해 중일관계를 조망해보면 일단 중국의 상대적 국력의 신장이 두드러지고, 여기에 미일 중심의 기존 질서를 바꾸고자 하는 중국의 강한 욕구에 의해 중일간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강력한 변수들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 일본이 아니라 미일동맹의 규정력 등 갈등을 완화, 억제하는 요인들 또한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일관계는 미중일 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당분간 갈등 요인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호 협조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중국은 기존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패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도 후진타오 전 정권처럼 '평화'에 방점을 둔 발전, 굴기를 지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중국과 일본은 기존의 정냉경열(政冷經熱), 아니면 최소한 정냉경량(政冷經涼)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이익과 갈등이 공존하는 프레너미(friend+enemy)의 관계를 지속해 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

Q1) 선생님께서는 중일관계를 세력균형보다는 세력전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세력전이론을 주장하는 기존 학자들은, 영토 통제력, 영향력 범위 확대, 자원 획득기회의 증대, 국제 지위의 향상 등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력이 강해질수록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발표에서 '중일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지역 경제질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경험적으로 보면 ASEAN 일부 국가들은 경제 분야에서의 중국위협론에 상당히 민감해 중-ASEAN FTA에 대해 반대 시위도 일어난 바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ASEAN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 안에 수월하게 들어올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1) 말씀하신 대로 세력전이론의 일반적 결론은 부상하는 국가와 기존 패권국 간에 전쟁과 같은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상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일관계는 미중일 관계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중일관계가 아니라 미중일 관계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일동맹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내에서 중국은 어디까지나 도전자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평화적 부상'은 중국이 여전히 방어적 굴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규정하는 자본주의 틀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새 틀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ASEAN과 중국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물론, ASEAN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경계가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ASEAN 접근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미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남아 지역 일부에서 거래수단으로 위안화가 달러보다 더 많이 쓰이는 등 경제적으로 ASEAN이 중화경제권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ASEAN 국가들이 중화경제권으로의 흡수를 크게 경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교경제권의 특징도 있는데다, ASEAN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Q2) 저는 질문보다는 몇 가지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중국 지도부의 세대교체로 인해 중일관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경제성장에 집중해 왔고, 주변국들을 의식해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를 별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국의 군사전략상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이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세적 행동이 아니라는 홍보가 부족한 것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중국 지도부는 한국, 일본, 북한에 대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전략을 취할지 심사숙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중국의 새 지도부는 비전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베이다이하 회의 등을 통해 모든 정치국원들이 한데 모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오랜 기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점점 증대되어 왔고요. 또 새 지도부는 문화대혁명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변화에 더욱 민감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세계의 흐름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체계적인 대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체제 내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새 지도부의 자세가 충분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대외정책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Q3) 선생님께서는 발표에서 이전에는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점점 이 지역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일본은 전후 배상문제를 통해 동남아 지역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들어갔었고, 이를 기반으로 무역규모도 점점 확대하고 직접투자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양상은 지금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여전히 동남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긴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간에도 남중국해 영토분쟁이 심각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3) 동남아가 과연 현재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차세계대전전에 소위 남방경제권 형성과 흡수를 위해 일본이 동남아에 진출했었고, 1950년대부터 일본은 전전에 식민지로 갖고 있던 조선을 비롯한 대륙의 상실을 동남아 확보를 통해 만회하고, 동남아의 자원과

시장을 개발함으로써 전후 복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동남아 일부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체로 화교경제권과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ASEAN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ASEAN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RCEP 추진을 위해 일일이 ASEAN 각국 정상들을 만나 각개격파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경제력을 무기로 상당한 우대조건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과 ASEAN 관계에서 이런저런 갈등요인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ASEAN이 결국 중국의 자본력과 리더십에 흡수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ASEAN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면 될수록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고될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분명합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을 견제하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ASEAN+3의 경제협력 구도가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데서 아실 수 있듯이, 앞으로도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경제 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4) 선생님께서는 가치관과 이념의 문제를 분석의 범주로 넣으셨는데요.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규모의 성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 사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확산시킨 것처럼요.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새 지도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국제 사회에 제시할 비전이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중국 패권이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을 포함한 학계에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4) 일반적으로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군사력인데요, 특히 세계 곳곳에 대한 투사능력,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능력, 항공모함 등을 갖춘 시스템이죠. 둘째는 최소한 전세계 경제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력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경제의 룰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다들 잘 아시는 소프트파워죠. 예컨대 세계의 국가들이 미국 패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자유, 평등, 시장경제 등의 이념이 그 만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중국 부상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갈라져 있습니다. 조셉 나이의 경우는 중국으로의 패권 전이에 대해 부정적인데, 그 근거로 소프트파워의 열세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내세우는 공자학원, 유교사상, 조화세계 등 이런 것들이 세계에 통용되는 지배이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철학적으로 좋은 이념이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조차도 설득될 만한 담론을 만들 능력을 중국이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만든 담론 체계에 중국이 오랫동안 편승하면서 성장했는데, 중국은 세계가 아니라 주변국조차 설득할 논리조차 아직 갖추지 못한 거죠. 중국 스스로 빈부 격차, 인권 등의 국내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중국이 인류 보편의 이념에 대한 인식조차 결여한 것처럼 비쳐지기도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지배질서 이념을 뛰어넘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패권전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Q5) 일본의 전략을 언급하신 부분에서, 헤징 전략에 대해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의 방향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 아마 방위대강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제가 주목한 것이 방위 전략과 관련된 장래구상입니다. 하토야마 정권의 실패가 당시 역내 세력균형 구도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의 부상과 미국 패권의 쇠퇴라는 큰 흐름을 포착한 것은 틀리지 않았지만, 이 두 현상은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중국 부상은 이미 현실이 되었지만, 미국 패권 약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진출전략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장래구상은 앞으로의 역내 세력균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각으로는, 중견국의 입장에서 'like-minded'의 다른 중견국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체결했고, 호주와의 동맹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전략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일본이 미국이나 중국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운다기 보다는, 자국의 위상을 중견국가로 정하고 이에 기반해서 역내 중견국가들과 새로운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전략이 반드시 헤징으로 간주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국이 불안해지게 되면 이런 전략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5) 저는 발표에서 일본의 대중정책을 일방적인 종속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헤징이라는 용어를 쓴 측면이 있습니다. 도쿄재단에서는 일본의 전략을 통합, 균형, 억지 전략이라고 정의했었죠. 통합전략은 중국을 잘 유도해서 기존 질서에 통합되도록, 그리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두번째 균형 전략은 미국의 힘을 빌려서 중국과 세력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억지 전략은 일본 자체도 그리 약소국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직접 억지전략도 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략은 여러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헤징의 의미는, 일본의 정책이 균형전략과 편승전략의 요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헤징이란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12월의 일본 총선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집권하면, 공약상으로는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고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 공약이 실현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고, 모두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1920년대처럼 일본 전체가 군국주의로 경도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방어적 전략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본은 어느 때는 중국 편을 들면서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고, 한편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헤징 전략을 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중견국가나 약소국의 선택은 결국 헤징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선택지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끝/